

# 노동시장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하여야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 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6만 8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6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로 연간 취업자 증가폭 2018년 10만 명 미만, 2019년 30만 명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19)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2.3%라는 시나리오하에서, 취업자가 21만 명(상반기 25만 명, 하반기 16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sup>1)</sup> 이는 단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벗어났던 노동시장이 본래의 추세로 복귀하였음을 의미한다. 2020년 1월의 취업자 증가는 전망을 훨씬 상회하는 긍정적 성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51만 명 늘어난 사실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의 확대와 예산의 조기집행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므로 근본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에 따른 대내외 경기둔화가 중첩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던 2018년의 일시적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전반적 대내외 여건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속적이고 근본적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된다. 더불어 중국발 코로나19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

1) 한국노동연구원(2019), 「2019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0년 전망」, 『노동리뷰』 12월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패키지도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 노동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특집은 우리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2020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을 다루고 있다. 먼저 미국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전례 없는 (2%에 가까운)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낮은 실업률(3.6%)을 기록하였고, 여러 전망자료들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 역사의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에서 저임금근로자의 증가 등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수입 비용 증가,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신뢰 및 투자 위축을 야기한 무역전쟁의 효과가 이미 제조업 부문의 위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무역협상과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및 연방부채의 급증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경제는 탄력성을 보이며 착실하게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적어도 대통령선거 국면이 지속되는 2020년에는 이러한 긍정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6.1%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2020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5.8%로 바오리우(保六: 경제성장률 6% 유지)가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코로나19가 진행되는 현재 5% 초반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2019년 도시 지역 등록실업률은 3.6%까지 줄어든 반면, 조사실업률은 5% 수준을 유지하여 고용 측면에서는 전반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경기침체 압력과 미중무역 분쟁 영향의 가속화는 안정 속의 변화와 도전을 낳고 있다.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동분쟁 발생건수는 2018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났고 관련 노동자 수 역시 15% 늘어나 2017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의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악화로 노동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기호조에 힘입어 2013년부터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인구감소에도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48.9%에서 52.5%로 3.6%p 상승하여 노동공급을 견인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18년 2.4%(2017년 2.8%)까지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100세 인생시대를 대비한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을 통하여 정년폐지, 70세 정년, 계속고용제 등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중도채용 촉진, 겸업 및 부업 확대, 프리랜서 보호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고용 증가가 주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2015년부터는 정규직도 증가하고 있는 국면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법제의 시행(2020년 4월)이 고용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관심사이다.

독일은 최근 14년 연속-전후 복구기간 이후 최장기-고용성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률은 감소하지만 일자리 소멸률이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결과이다. 50세 이상 고용률은 2005년 34%에서 2018년 45%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여성의 고용률은 10%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10.3%에서 3.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9년 고용성장률은 2011~2018년 1.1%나 2018년 1.4%보다 훨씬 낮은 0.9%에 불과하여 독일 ‘고용기적’의 불안한 기반과 함께 국제경제환경은 비관론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처방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1년 전 글로벌포커스에서 언급한 관련 의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일본의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에서 보듯, 인구고령화의 제약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면,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맘껏 일하는 한편 교육과 노동시장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주52시간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향후 장시간근로 문화는 개선되어 갈 것인바, 올해는 특히 생애노동 최적화의 걸림돌이며 노인빈곤의 근원인 정년과 시간제근로에 정책노력을 기울이되 불합리한 노동시장 차별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가는 징검다리를 하나 놓는 것이 현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KL**